

더 늦기전에 철저한 환경관리를...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으로 나라안이 들쭉거리고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있는 환경오염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단편적인 예일 수도 있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파급되고있는 환경오염의 병세가 언제, 어떤 양상으로 우리들 앞에 출현하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남권 전역을 식수공포로 몰아넣은 이 사건은 표면상 말단 환경공무원 7명을 구속하고 오염의 주체인 두산전자측에 30일간의 조업정지를 내린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국민들의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좀처럼 사그러질것 같지않다. 열악한 중소기업도 아니요, 내노라하는 재벌기업이 알뜰한 상혼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롱했으니,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페놀사건에서 나타났듯이 환경오염을 자행한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세계각국은 환경보호조치를 수용하지않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선 시장개방을 하지않으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제경쟁력까지 상실하게 된다.

기업의 부도덕성과 이기심의 전환이 없으면 제2, 제3의 페놀오염사건을 막을 수 없다.

사실 기업들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투자를 비생산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 투자에도 인색하다. 이 문제는 환경관리인들의 노력만으론 불

가능하다. 무엇보다 기업주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일정규모의 업체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설치토록해 전문기술인력이 철저한 환경관리를 하도록 해야하며, 환경관리인들이 정확한 생산공정을 파악해 배출오염물질에 대해 충분히



李龍雲
(본연합회 회장)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인들의 환경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이나 건의사항이 기업주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결재단계를 최소화하여 품위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것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동안 당국의 지도단속에도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았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상담은 뒷전에 둔채, 건수를 위한 실적 위주의 지도단속, 행정처분권과 지도단속권의 이원화로 파생됐던 잡음 등등...

특히 전문인력과 오염측정장비, 그리고 예산부족으로 환경처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서 현재 환경처와 시·도의 지도대상업체

수는 4만7백67개소에 달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요원은 1천2백여명에 불과해 1인당 20~90개 업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측정장비 역시 절대부족하다.

이러한 허점에다 위반업체의 업주를 처벌하기보단 배출부과금위주로 처리하여, 막대한 시설·가동비가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투자보단 벌과금이 싸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의 오염행위를 부채질한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낙동강수계상수원을 다변화하는 것을 비롯, 환경인력과 장비를 대폭 증원·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회에 의식있고 실력있는 전문인력을 공개채용해 환경행정전문성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환경문제개선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야한다.

정부는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하며, 기업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확립,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철저한 환경관리를 기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국민 스스로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소비생활을 개선하고 정착시켜야하며 선의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한다. 더 늦기전에,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 ◀